

金 仁 植 議員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시민의 희망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민주당 비례대표 김 인 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신 박성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마지막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물어 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서 색이 바랜 나뭇잎들을 보며, ‘가을도 늙는구나.’ 하는 어느 시구(詩句)를 떠올리며,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세계경제 침체와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희망과 신뢰를 갖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대전시가 대한민국 제1의 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위기 속에서 대전의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 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언론기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脫 대덕’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대덕특구는 전국 최대의 연구 및 기술역량이 결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 집적지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과학기술분야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 왔고, 앞으로도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덕특구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덕특구의 위상이 점점 추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위해 대전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덕특구의 연구역량이 더욱 결집되고,

강화되지는 못할망정, 대덕특구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대전시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분원, 분소, 연구센터 형식으로 연구시설들을 타 지역에 이전 또는 설립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개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개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개소, 한국원자력연구원 2개소, 한국생명과학연구원 2개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개소 등 연구기관마다 2~5개소 이상씩 타 지역에 분원 또는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脫 대덕’ 현상은 2004년부터 점점 더 본격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앞으로도 타 지역에 더 많은 분원 또는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실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 후의 핵연료 재활용 등을 위한 ‘순환형 원자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165만~198만 평방미터 규모의 제2연구소 건립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슈퍼컴퓨터 제 5, 6호기 도입에 따른 공간마련을 위해 ‘슈퍼컴퓨터 전용건물’을 타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KAIST도 세계 유수의 대학, 연구소들과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국제화 공간 마련을 위해 인천 송도 청라지구에 ‘제3캠퍼스’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최근 MOU를 체결했는가 하면, 에너지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도 각각 분소나 연구협력센터를 타 지역에 설립하거나 개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탈현상이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로

첫째, 지난 30여 년간 연구기관들이 성장하면서 근무인원 증가 및 기자재 설치 등 연구용 부지 확장이 필요해졌지만, 특구 내 지가가 상승하면서 부지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며,

둘째,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예상했던 시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전시 등 관계 부처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내면에 깔려 있고,

셋째, 타 지자체들이 지역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매달리면서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부지 무료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별다른 대처방안 없이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정부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脫 대덕’을 별 제동 없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다른 한 쪽에서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수 조 원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구원에서 도대체 한 일이 뭐 있냐?’는 식의 대덕특구를 폄훼하는 시도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脫 대덕’과 ‘대덕특구 폄훼’ 시도가 지속되어 대덕특구의 위상이 점점 추락될 경우,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유치와 산업육성정책에 큰 차질이 있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脫 대덕’을 ‘정치논리에 따른 나눠먹기식’과 ‘연구 성과의 확산 및 공유’로 보는 등 의견차이가 있지만, 국가 과학기술 전략상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육성된 대덕특구의 위상과 앞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계에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 전국의 6개 과학 연구단지 지정과 타 지역 정치권의 특구확대지정 법률안 제출 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타시·도의 대덕특구 흔들기를 막고, 추락하는 대덕특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연구기관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용지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기관이 이전·확장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연구용지 부족문제로 인해 타 지역에 분원, 분소 등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덕특구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연구 또는 산업용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 그린벨트 해제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대덕특구본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특구 입주기업의 국세·지방세 감면 확대, 연구소 기업 설립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 및 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여 대덕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면 관리 및 처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마법의 광물, 돌에서 뽑아낸 실, 그러나 침묵의 살인자, 끝나지 않은 고통, 석면의 공포를 알고 계십니까?

석면은 마그네슘과 규소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 질로써 솜처럼 부드러운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6·70년대 근대화시기에 석면은 건설산업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고, 평균 융점이 1,540도로써 열에 강하고 전기도 통하지 않아서 단열재나 절연재, 심지어는 방음·흡음재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3,000여가지 이상의

공산품에 사용할 정도로 일상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건축물에서는 지붕의 슬레이트, 천장재인 텍스, 칸막이 큐피클, 밤라이트 보드 등의 내장재와 단열재로 이용되어 왔고, 배관 가스켓과 닥트의 내열재 및 불연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동차와 산업시설에는 마찰재료도 널리 사용되었고, 현재도 석면을 사용하는 곳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처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석면이 우리 인체 내에서 10~30년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졌습니다.

사람 폐에 들어간 머리카락 굵기의 5천분의 1 정도의 석면 분진은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불가능하여, 한 번 발병되면 100%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전시민들이 석면 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서남부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2천 3백여 톤의 석면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지난 9월 23일자 중도일보 기사에 의하면, 2008년 10월 8일 오후 5시 19분에 생태하천 복원을 목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중앙데파트’ 건물에 석면이 약 2천 평방미터가 있어 석면 피해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석면환경협회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석면 텍스와 슬레이트를 먼저 해체 제거한 후 ‘중앙데파트’를 폭파·해체 하였지만, 석면을 제거하였더라도 소량의 잔재물이 남아 있을 위험성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증이 없었으므로 안전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 차원은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정감사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면관리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정부합동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7년 7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금년 9월부터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식 석면 폐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석면지도 작성을 위한 용역의뢰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고, 부산시에서도 교육청, 지방노동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석면피해신고 센터 설치, 석면실태조사, 분석센터 개설 및 대학병원 내 환경질환 센터 개설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전시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도 건축물 멸실 및 철거, 폐기물 관리, 산업안전보건,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실내공기질 및 대기환경보전, 그리고 환경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석면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 중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시 석면 함유여부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석면함유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대전지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우리시 서구에 신고된 건수는 321건에 이르지만 배출자가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한 건수는 9건에 불과하여 관리 실태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동구 413건, 중구 169건, 유성구 168건, 대덕구 178건 등 우리시의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건수는 1,24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약 50%인 621건이 대전 지방노동청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일선 구청의 행정여건상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은 십분 이해되지만,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관리·감독의 소홀, 폐기물 처리결과의 확인과정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석면이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이행사항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민건강 및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대전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석으로 변하는 교육정책을 믿을 수 없어 사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조기유학생의 수와 경비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중·장기적인 종합발전방안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특히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 교육의 경우에 있어서, 이는 머지않아 사상누각(沙上樓閣)의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 가운데서 가장 자주 바뀐 정책은 교육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의 불투명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매우 낮습니다.

다행히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얼마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진정한 교육자치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는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로 인해 많은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전시 교육청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자율·책임의 경영 역량이 미흡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지방에 알맞은 교육의 실천’을 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을 대전시 교육 전반에 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전시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단위학교들이 빠른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시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진단하여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 및 구체적 실천 전략을 모색하여 대전시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지속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2002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교육청 및 각 부서에서 수립한 발전 방안과 관련된 21건의 고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표 1>

첫째, 대전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방안 수립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대전교육발전계획’ 단 1건에 불과하며, 이 또한 대전시의 기획과 예산으로 수행된 연구로 대전시 교육청의 자체 노력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표 2>

따라서 대전시 교육청 차원의 발전 방안 수립은 전무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 1〉 대전시 교육청 발전 방안 수립 현황 (21건, 괄호 안 숫자는 보고서 건수)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시 교 육 청	교육정책담당관실(4)	×	×	×	●(2)	●	●	×
	혁신복지담당관실(0)	×	×	×	×	×	×	×
	공보감사담당관실(0)	×	×	×	×	×	×	×
	초등교육과(1)	×	×	×	×	●	×	×
	중등교육과(1)	●	×	×	×	×	×	×
	과학직업정보과(7)	×	●	●	●	●	●	●(2)
	평생교육체육과(1)	×	×	×	●	×	×	×
	총무과(1)	×	×	×	●	×	×	×
	행정지원과(0)	×	×	×	×	×	×	×
	재정지원과(6)	●	●	×	●	●	●	●
	시설과(0)	×	×	×	×	×	×	×
동부교육청(0)		×	×	×	×	×	×	×
서부교육청(0)		×	×	×	×	×	×	×

자료 : 대전시교육청 내부자료(2008. 10.)

〈표 2〉 대전시 교육청 발전방안 보고서 목록

부서	연도	제목	외부용역여부
교육정책 담당관실	2005	대전교육발전계획	대전발전연구원
	2005	대전교육가족 교육의식 조사 연구	자체발간
	2006	대전의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연구	"
	2007	전문계고 교육여건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 개선방안	"
초등교육과	2006	사교육실태조사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연구용역*	한국교육개발원
중등교육과	2002	평준화 적용지역 신입생 전형 및 배정방법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평생교육 체육과	2005	대전광역시 초등학생의 비만도 및 관련 요인 평가와 관리전략 개발*	"
과학직업 정보과	2003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Ⅰ)	자체발간
	2004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Ⅱ)	"
	2005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Ⅲ)	"
	2006	국가 직업교육체제혁신 방안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방안	"
	2007	국가 직업교육체제혁신 방안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방안	"
	2008	국가 직업교육체제혁신 방안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방안	"
	2008	제2차 대전영재교육 발전계획	"
총무과	2005	교육청 기록관리 개선연구	(주)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재정지원과	2002	2002~2006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자체발간
	2003	2003~2007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
	2005	2005~2009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
	2006	2006~2010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
	2007	2007~2011년 중기대전교육재정 계획	"
	2008	2008~2012년 중기대전교육재정 계획	"
자료 : 대전시교육청 내부자료(2008. 10.) * 교육현안 관련 연구로 3건이 해당됨.			

둘째,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의 각 부서별 발전 방안 수립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도 역시 발전 방안 수립이 전무하였으며, 예외적으로 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의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 방안’ 수립과 재정지원과의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만이 지속적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발전 방안 수립 현황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대부분의 보고서 내용이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우리 교육청이 눈앞에 닥친 시급한 교육 현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전시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목적지와 나침반 없이 배가 바다 위를 표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대전시 교육청은 더 늦기 전에 대전시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지역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교육 발전의 토대를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브랜드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 교육의 전반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종합발전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새롭게 수립되는 대전시 교육의 비전과 발전방안은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지역사회 등이 협력하여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한두 사람에 의하여 수립한 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장기 발전 방안 및 구체적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전시 교육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액션 플랜까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단계별 추진 전략 및 과제의 실천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피드백 방안과 보고서 내용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바로 ‘전국 최고의 교육브랜드’ 창출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대전시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교육 및 행정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대전시와 교육청이 대전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안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반성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